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17호

국민여론조사

대한민국 체육 과거 100년은 '국위선양', 앞으로는?

MK스포츠 뉴스팀

대한체육회

'체육인 인권 최우선'...스포츠인권실 신설

박진업 스포츠서울기자

K리그

'선수 동의 없이 이적 가능' 계약 조항 **인권침해** 논란

김해욱 UPI뉴스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대·선수 안 돼도 스포츠 즐길 권리 보장... '스포츠클럽법' 국회 통과

이세아 여성신문기자

'스포츠기본법안' 공청회...관계법 체계 정비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손봉석 스포츠경향기자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대한민국 체육 과거 100년은 '국위선양'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 대한민국 체육에 적합한 키워드는?

우리 국민은 '인권침해 근절'을 우선으로 꼽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이지만, **선수 인권보호를 포함해 스포츠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체육 향후 100년 방향성 인식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20. 12월)

한눈에 살펴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7대 권고안

- 제 1차 권고**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 제 2차 권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 제 3차 권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 제 4차 권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 제 5차 권고**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 제 6차 권고**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 제 7차 권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대한민국 체육의 지난 100년은 '국위선양', 앞으로 100년은 '인권침해 근절'이 적합한 키워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0년 12월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한민국체육 향후 100년 방향성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과거 100년 대한민국 체육은 '스포츠 국위선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32.9%로 가장 많았다. '체육교육 체계화'가 19.1%, '메달에 대한 도전'이 15.1%로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 체육 미래 100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참여자 24.3%가 '인권침해 근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 개선과 선수 육성 선진화'가 22.8%, '체육단체 구조 선진화'도 15.2%로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세계 10위권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대한민국 체육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권침해 근절 등 스포츠 혁신에 대한 필요성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나온 '스포츠 혁신 7대 권고안'을 강조한 문화체육관광부는 ▲ 인권 중심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훈련 환경 조성 ▲ 인구감소,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포츠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건강한 스포츠문화 정착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체육인 인권 최우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실 신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 인권을 최우선하는 스포츠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21일 스포츠인권실을 신설했다.

스포츠인권실은 사무총장 직속 정식기구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폭력 추방 대책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준수를 위한 인권경영 업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스포츠인권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시스템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최근 몇 년간 스포츠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무겁게 인지하고, 국내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스포츠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인권실을 신설했다.

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근본 토대부터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또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정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인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건강한 스포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선수 동의 없이 이적 가능’ K리그 계약 조항 ‘인권침해’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프로축구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일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은 독소조항이 유지된 개정안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FIFA 징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은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중 '선수 동의 없이 구단 합의만으로 가능한 이적'을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조항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성명에서 다른 클럽이 제시하는 조건이 선수의 현 계약보다 유리하면 이적해야하는 조항은 FIFA의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막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프로축구연맹 측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이적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공정위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타 프로스포츠 종목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선수 권익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프로축구 선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계약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계약서의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노동법 전문인 진모 변호사는 "이번 계약서 개정안 중 선수 이적 규정은 한쪽의 권리나 의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무효인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프로야구에서 지난 2001년 선수이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구단에 봉사한 선수들의 경우 양도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단의 무제한적인 양도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제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며 "약관규제법은 근로자 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은 자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연맹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선수 인권 보호 향상을 위해 주요 프로스포츠 4대 종목 선수표준계약서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한국프로선수협회 측은 새 개정안에 독소조항이라 지적했던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매해 연봉 협상, 초상권 구단 귀속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해당 논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현재 연맹, 구단, 선수 등과 수정할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최종 개정안은 6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대·선수 안 돼도 스포츠 즐길 권리 보장... '스포츠클럽법' 국회 통과

국가대표나 전문선수가 되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국민 체육활동 참여 기회도 늘리고, 선수 풀도 만들고, 체육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스포츠 폭력·인권침해 사건으로 이어진 '성적지상주의'를 탈피할 첫 걸음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과 박정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공모를 거쳐 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해, ▲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도 늘리고, 수준 높은 전문강습 기회도 제공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 폭력 낳은 '성적지상주의' 깰 첫 걸음” 환영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2019년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혁신위는 당시 스포츠 '미투(#MeToo)' 등 스포츠 내 인권침해 고발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폭력·인권침해 사건의 근원이 '성적지상주의'라고 진단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외에도 학교 체육 정상화, 스포츠 인권 강화,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스포츠클럽 생활화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을 탈피해 스포츠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스포츠를 통해 '일상에서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 '스포츠기본법안' 공청회... 관계법 체계 정비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정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부처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상겸 교수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1980년대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와 몇몇 구기종목의 프로스포츠 도입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편,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대회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국민의 스포츠활동이 생활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증가하여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를 핵심으로 한 일관성 있는 스포츠정책 마련을 위해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스포츠중재위원회,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반면, 스포츠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 냈다.

성문정 연구위원은 그간 국민체육진흥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체계와 내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간의 스포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본이념을 상세히 나열하도록 하고 스포츠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스포츠인권,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한 스포츠정책 수립의 구체적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한 의원들은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로 명확히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중복되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며,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e-스포츠 등 정신활동에 대해서도 스포츠로 포함할 것인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스포츠기본법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용, 박정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paulsohn@kyunghyang.com

주간 스포츠 소식

국군체육부대 징계 정보도 스포츠윤리센터 게재 추진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847>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심신이 따뜻한 학생선수 '온(溫)캠프' 운영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380>

진주교육청, 학생 선수 학부모와 청렴 토크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13>

제주도, 스포츠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http://news.tf.co.kr/read/national/1862219.htm>

개최 다가오는데...인권문제로 잡음 커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https://www.ajunews.com/view/20210519104309839>

[OBS 뉴스오늘 2] '경기도 최숙현법' 스포츠 인권 조례 제정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509>

[한스초대석]경기도의회 문체관위 최만식위원장, “‘관행 중심’ 경기체육, 체질부터 바꿔야”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16>

[단독] 약속한 시장 없다고? 서울시청 심석희 계약금액 일부 못 받나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1879

탁구협회의 꼼수...5억 포상금으로 가린 '선수 선발 불공정성' 논란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42770?ref=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